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 “현대산업개발 선처를”

서울시,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740가구 선처 호소 탄원서 제출 ‘피해 회복·재시공’ 진정성 확인 ‘영업정지 땀 공사 중단 등 피해’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해당 단지는 3년 만에 철거가 완료되고 재시공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최근 건설업계의 불안정한 상황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 등으로 인해 준공 및 입주 일정이 또 다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이 19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을 면담하고 현산의 행정처분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 작성에는 전체 847가구 중 740가구(87%)가 참여했다.

입주예정자들은 현산이 장기간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공사가 중단되거나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시공사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는 19일 탄원서를 통해 “현산은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주거지원금 무이자 지원 등의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했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지상 주거부 해체를 완료했고, 재시공을 시작했다”며 “이 과정에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해체 범위를 확정 지었고, 고품격 단지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단지 특화방안까지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현산에 대한 초기의 불신과 원망을 극복하고, 회사의 진정성을 믿고 또다시 3년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입주예정자들은 “현산이 이러한 약속과 지원 대책을 책임 있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회사경영의 안정성이 필요하지만 최근 대내외 경기 악화와 건설사들의 연이은 부도로 인해 흑시라도 준공과 입수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만약 시공사인 현산이 장기간 영업정지 등 과중한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그 여파로 입주 일정이나 아파트 품질에도 나쁜 영향이 미치는 않을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사고에 대한 법에 따른 처벌은 마땅하다. 그러나 행정처분에 있어 처분대상자의 과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처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처분으로 이루고자 하는 공익과 처분대상자의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衡量 해야 함이 응

당한 처사”라며 “현산이 피해회복 및 전면 철거 이에 따른 재시공 과정을 통해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감내한 만큼 우리 입주예정자들 입장에서 지난 3년간 충분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 역할을 하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모두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만약 시공사의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약속한 지원 대책 및 재시공 일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우리 입주예정자들은 또다시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한 주거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안전한 재시공과 주거안정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공사 현산이 지속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2년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현산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자, 기술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꾸렸지만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했다. 시는 지난 1월 1심 선고가 나온 만큼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탄원서가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상아 기자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이 19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을 면담하고 현산의 행정처분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입주자협의회 제공

경실련, ‘지방분권’ 헌법 개정 나서…추진단 출범

‘지방분권 국가’ 헌법 조문 추가

경실련이 지방분권 헌법 개정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꾸리고 활동에 나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24곳의 지역 경실련은 18일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위한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은 앞으로 중앙(대통령·국회)에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지방정부와 지방정치로 나누기 위해 헌법 개정 운동을 펼치게 된다.

경실련은 “12·3 계엄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력 구조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높다”며 “지난 박근혜 탄핵

당시, ‘87 체제’의 한계 극복 기회를 놓친 만큼 국민주도 개편으로 지방분권 개헌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87체제는 지난 1987년 표면적으로 급속도로 민주화가 이뤄진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를 일컫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지방분권과 관련한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마련 △지방분권 개헌안 국회 청원 △정치권에 지방분권 개헌 공약 요구 △대국민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단의 공동 단장에는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과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선임됐다.

정유철 기자

398억 임금 체불…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징역 4년

함께 기소된 임원 집행유예

법원이 300억대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과 김혁표 위니아대표이사에겐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혐의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일부 혐의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변제 계획을 내놓지 않고 합의도 성실히 하지 않았다”며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은 근로자 가족의 생계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다수의 근로자들이 박 회장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근로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아침밥이 보약! 아침부터 활약!

오늘, 아침밥 챙기셨나요?

아침밥의 힘은 몸이 먼저 알기에

단지 하루의 건강이 아니라 평생의 건강이 되도록

농협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농협